



## 심의 · 의결현황

제 1 장 심의 운영방침

제 2 장 심의 · 의결 현황 분석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9대 총선에 이어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심의 운영방침을 정하여 시행했다.

기존에 활용되어 온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 및 ‘주의사실 게재’ 결정은 언론사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제재조치로서 공직선거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변형결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모 방송사에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제재조치인 ‘경고’를 내린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에서 아무리 약한 제재조치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을 강하게 천명하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2007헌마290 2007. 11. 29. 전원재판부). 따라서 이번 심의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 규칙 및 심의기준에만 변형결정을 유지하고 실제로는 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선거법상 규정된 사과문 게재 결정을 활용하기로 하고 적용기준에 관한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사과문 게재 결정을 하기로 했다.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심의위원회의 조사결과 또는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 등을 참고하여 해당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기로 했다.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선거기사의 내용에 대한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의 반론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기로 했다.

그리고 언론사의 이행을 요하지 않는 제재로서 주의 및 권고 외에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고 결정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경고조치와 사과문 게재결정 사이에 간격이 크다는 문제점도 있어 공직선거법상 심의위원회 제재조치의 다양화 및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주의 결정은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리기로 했다.

또한 해당 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선거기사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권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 제2장

## 심의·의결현황 분석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는 선거기사에 대한 자체심의와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심으로 구분되어 진행됐다. 심의 결과 자체심의 47건, 시정요구 심의 4건, 재심청구 심의 3건 등 총 54건의 심의가 이뤄졌으며, 반론보도청구회부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 I. 심의유형별 분석

## 1. 자체 심의

심의실무를 담당하는 기사심의팀은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추천을 받아 채용한 언론사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심의원들과 함께 대상매체(중앙일간지 31개, 지역일간지 100개, 종합주간지 32개, 지역주간지 206개, 특수주간지 4개, 월간지 25개, 뉴스통신 3개 등 총 401개)의 선거관련 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기사를 가려낸 후 이를 심의 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쳤다.

심의위원회는 총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47건의 자체심의 안전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47건 중 주의가 27건(57.4%)로 가장 많았고, 권고 11건(23.4%), 경고 8건(17%) 그리고 사과문 게재 결정이 1건(2.1%)이었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2건(25.5%), 여론조사 보도요건미비 12건(25.5%), 광고 제한 위반이 10건(21.3%), 정책비교 서열화 금지 위반이 8건(17.0%), 외부기고 금지 위반이 4건(8.5%)으로 나타났다.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일간지가 22건(46.8%), 지역일간지 16건(34%), 종합주간지 4건(8.5%), 월간지 2건(4.2%), 지역주간지, 특수주간지 및 뉴스통신이 각각 1건(2.1%) 순으로 선심위의 제재를 받았다. 전국적으로 여러 후보가 선거전을 펼쳤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일간지에 대한 제재 건수가 많았던 것과 달리 후보자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중앙일간지에 대한 제재가 지역일간지에 대한 제재보다 높았던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자체심의 유형별 의결현황】

구 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형평성 위반		사실 보도 위반	여론 조사 보도 요건	정책 비교	기고 위반	의견 광고	사과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간 별	인물 부각	인물 비방											
일간 신문	중앙	22				6	6		10		2	14	6
	지역	16	4	1	1	5	1	4		1	3	8	4
종합주간지		4	3			1					1	3	
지역주간지		1	1								1		
특수주간지		1					1					1	
월간지		2	2								1	1	
뉴스통신		1	1										1
총 계		47	11	1	1	12	8	4	10	1	8	27	11

【자체심의 매체별 의결현황】

구 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간별	매체명		공정성· 형평성 위반		사실 보도	여론 조사	정책 비교	기고	의견 광고	사과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인물 부각	인물 비방										
중앙 일간지	경향신문	3				1	1		1			2	1
	데일리 노컷뉴스	1						1				1	
	동아일보	4				1	2		1			3	1
	매일경제	1				1							1
	문화일보	1							1			1	
	서울신문	3				1	1		1			2	1
	세계일보	1				1							1
	조선일보	4							4		2	2	
	중앙일보	1					1					1	
	한겨레	2							2			2	
	헤럴드 경제	1				1							1
	소 계	22				5	6		10		2	14	5

구 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간별	매체명	계	공정성· 형평성 위반		사실 보도	여론 조사	정책 비교	기고	의견 광고	사과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인물 부각	인물 비방									
지역 일간지	경남매일	1				1						1	
	경북도민 일보	2	1					1			1	1	
	경북매일	1	1									1	
	경북일보	1	1									1	
	광주 타임즈	1			1							1	
	대경일보	1				1							1
	대구일보	1						1			1		
	대구 연합일보	1				1							1
	대전일보	1				1							1
	시민일보	1						1		1			
	시사서울	2						1	1				2
	아시아 일보	1	1										1
	아시아 투데이	1		1								1	
	영남일보	1				1							1
	소 계	16	4	1	1	9	7	4		1	5	22	8
종합 주간지	미래한국	1	1									1	
	일요시사	2	1			1					1	1	
	일요서울	1	1									1	
	소 계	4	6			10					6	24	
지역 주간지	남해시대	1	1								1		
	소 계	1	6								6		
특수 주간지	여성신문	1						1				1	
	소 계	1						0				0	
일간지	경제풍월	1	1									1	
	서울21	1	1								1		
	소 계	2	1								0	1	
뉴스 통신	연합뉴스	1	1										1
	소 계	1	1										0
총 계		47	11	1	1	12	8	4	10	1	8	27	11

## 2. 시정요구 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선심위에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4건으로 중앙일간지 3건, 월간지가 1건이다. 선심위는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의결결과 정정보도문 게재 1건, 기각 1건, 각하 1건, 취하 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취하된 1건은 신청 후 반론보도문이 게재되었다.

【시정요구심의 매체별 의결현황】

간 별	구 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매체명	계	공정성 및 형평성	사실보도	정정보도문 게재	취 하	기 각	각 하
중앙 일간지	문화일보	1	1					1
	조선일보	2	1	1	1		1	
	소 계	3	2	1	1		1	1
월간지	월간조선	1	1			1		
	소 계	1	1			1		
총 계		4	3	1	1	1	1	1

## 3. 재심청구 심의

선심위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총 3건으로 모두 기각되었다.

【재심청구심의 처리결과】

연 번	재 심 청 구 인	결 과	원 심 결 정
1	시민일보	기각	2012국선19(자심) 사과문 게재 결정
2	문재인	기각	2012대선37(시심) 각하 결정
3	문재인	기각	2012대선46(시심) 기각 결정

## II. 결정유형별 분석

### 1. 사과문 게재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총 1건의 기사에 대해 사과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역 일간지인 시민일보는 2012년 9월 10일자 5면 「안철수, 국민을 바보로 아나?」, 9월 11일자 5면 「안철수,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9월 12일자 5면 「안철수 ‘불출마 종용’ 진실은?」, 9월 13일자 5면 「안철수, ‘꿈수 정치’부터 배웠다」 등 연속적으로 7번에 걸쳐 특정 예비후보자의 신상과 행보에 비판적인 칼럼을 게재하면서 단정적이고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사용하는 한편, 자극적인 제목을 게재하고 부정적인 사실만 선별·적시해서 심의위원회로부터 사과문 결정을 받았다.

### 2. 정정보도문 게재

금번 심의위원회에서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받은 건은 1건으로 시정요구 심의를 통해 이뤄졌다. 심의위는 문재인 후보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건에서 주요 후보자들의 의료정책을 비교하면서 시정요구인의 의료정책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적시한 것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했다.

### 3. 경 고

심의위원회가 자체심의로 의결한 47건 중 경고 결정은 8건으로 17%를 차지했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2건, 지역일간지 3건, 종합주간지 1건, 지역주간지 1건, 월간지 1건이다. 경고를 받은 매체 중에 특이한 사례로 서울지역일간지인 아시아투데이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의 행보 및 선거 이슈 등을 보도하면서 해당 예비후보자에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1면 등 주요 지면에 30차례에 걸쳐 비중 있게 게재하고 상대방의 비방 발언을 그대로 전달해서 경고를 받았다.

### 4. 주 의

자체심의 의결 건수 중 주의 결정은 27건(57.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일간지 14건, 지역일간지 8건, 종합주간지 3건, 특수주간지 1건, 월간지 1건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제한 위반이 8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2건, 기고 위반 1건이다.

## 5. 권 고

권고 결정은 11건(23.4%)이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6건, 지역일간지 4건, 뉴스통신 1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10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건이다. 권고 결정은 심의위원회 설치 초기에 계도차원 및 언론사에 대한 주의 환기 차원에서 주로 내려졌다.

## 6. 기 각

‘기각’ 결정은 시정요구심의 및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에서만 내릴 수 있는 결정 유형으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심의에서 1건, 재심 청구 심의에서 3건 등 4건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 7. 각 하

‘각하’ 결정은 시정요구심의 및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에서만 내릴 수 있는 결정 유형으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심의에서 한 건의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 Ⅲ. 위반유형별 분석

심의위원회가 자체 심의한 기사의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위반기사 총 47건 가운데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및 특정 후보 인물부각 또는 비방 등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기사가 각각 12건(2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견광고가 10건(21.3%), 정책 비교 보도가 8건(17%), 기고 위반이 4건(8.5%)으로 나타났다.

### 1.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심의한 안건 중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제재한 사례가 12건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기사와 동일하게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제재 시기는 심의위원회 운영 초기에 집중돼 있고 선심위에서 심의대상 언론사에 여론조사 보도요건 준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정보도 협조를 요청해서 제재 건수가 다른 선거에 비해 특별히 많지는 않았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대선1	매일 경제	5. 1. 5. 15.	A1면 A8면 A7면	- 박근혜 44.6% 안철수 39.9% - “與 국민경선 현 규정대로” 56% - 민주-진보 연대 反 43% > 贊 30%
2012대선2	대경 일보	5. 17.	2면	- 박근혜 대선 지지율 47% ‘1위’
2012대선3	영남 일보	5. 22.	4면	- 새누리 박근혜 범야권 안철수
2012대선4	대구 연합 일보	6. 4.	3면	- 양자대결 박근혜-안철수 51.9%-39.5% 박근혜-문재인 56.5%-34.5% - 다자대결 박근혜 43.1% 안철수 20.7
2012대선5	동아 일보	6. 5	A8면	- “문재인 지지율 9%로 하락… 김두관은 4%로 상승”
2012대선6	헤럴드 경제	6. 7.	4면	- 민주 대의원들에게 대선주자 물어보니… 文·孫·金 3強…5%P내 박빙 격차
2012대선7	경향 신문	6. 8.	6면	- 김두관 뜨자 대선주자 ‘박빙 3파전’
2012대선8	서울 신문	6. 8.	3면	- 민주 대의원 후보 선호도 문재인·손학규·김두관 박빙
2012대선9	대전 일보	6. 12.	3면	- 정당구도 양당체제 양상
2012대선10	세계 일보	6. 12.	4면	- 차 지지율 자신감에 대선정국 정면돌파… 복병은 ‘숨은 표’
2012대선11	경남 매일	7. 16.	3면	- 김두관 지지율 꿈틀댄다
2012대선14	일요 시사	7. 29. (864호)	4/5면	- 언제 그랬나 쑥 들어간 ‘박근혜 대세론’

## 2. 인물 부각 또는 비방 (공정성 형평성 위반)

특정후보자를 부각하거나 비방한 보도는 총 12건이다. 제19대 총선 선심위에서 가장 많은 제재 건수를 차지한 위반 유형이나 소수의 후보자가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지만 부각하는 기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특정 후보자를 크게 부각한 사례로는 김두관 예비후보자를 부각한 남해시대와 박근혜 당선인을 부각한 월간지 서울21이 있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대선12	연합 뉴스	7. 10.	정치	- 사상 첫 여성대통령 노리는 박근혜 누구인가
2012대선13	남해 시대	7. 5. (제310호)	1면 9면 20면	- 김두관, 8일 해남 땅끝마을서 출마선언 - 밥상머리교육 대상으로 삼아도 될 남해인물은 - 김두관 경남도지사, 대권도전 공식화
		7. 12. (제311호)	1면 4면 5면 6면 6/7면 7면 27면	- 김두관과 함께 평등사회로! - 김두관 후보 대선출정식을 다녀와서 - 고향마을을 찾은 김두관 전 지사 - '대통령 마을' 되고 싶은 이어리의 꿈 - 미니인터뷰 - "남해의 아들, 99%를 위한 대통령으로" - 동행취재기 - 50만 내외군민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7. 19. (제312호)	4면 20면	- 고향 남해에서 바라본 김두관1-이어마을 사람들 - 김두관 전 지사, 21일 서울서 출판기념회 - 김두관에게 '힘이 되는 향유'
		7. 26. (제313호)	6면 S14면	- 고향 남해에서 바라본 김두관2-장묘문화혁신 위해 전쟁 치룬 공무원들 - 김두관의 도전 '아래에서부터 위로'
2012대선17	광주 타임즈	9. 3.	2면	- 안철수, 지지율 상승세
2012대선18	서울21	9월호 (통권 제51호)	35면 36~39면 40~43면 44~45면	-   특집   육영수와 박근혜 - 인물 초대석   강인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 "육영수 여사, 월남출정 때 눈물로 손 흔들어 줬다" -   특집   영원한 퍼스트레이디 故 육영수 여사 추모 38주년 "그녀는 역사의 제단위에 던져진 한국의 위대한 어머니였다" - 사진으로 본 故 육영수 여사 제38주기 추도식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46~49면	- 인물 초대석   김구철 ‘여풍당당 박근혜’ 공동저자 및 TV조선 <뉴스와이드 참> 팀장 “박근혜가 대통령 될 것, 안철수는 검증 후 추락”
			50~51면	-   기획특집 ①   박근혜의 정치미학 국민행복 디자이너, 대한민국 대통령 이룬다
			52~53면	-   기획특집 ②   박근혜 ‘옥함상자’ 열다 박근혜의 한국적 가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애국주의’
			54~55면	-   기획특집 ③   박근혜 A to Z ‘한국적 스타일’, 육영수 여자와 닮은 꼴
			56~59면	- 수리철학으로 풀어본 2012년 대선 전망   임선정 양박문화재단 원장 “연말 대권은 전생부터 준비된 촛, 용천박 대박난다” 예언
2012대선25	일요 서울	10. 22. (제964호)	62~63면	- 대예언 18대 대통령은 바로 이 사람... “이번에 되는 대통령은 최고의 성군될 것”
2012대선28	경북 도민 일보	11. 12.	1면 3면	- ‘18조 규모 국민행복기금 설치’ - 文 “사람이 먼저, 가치실천 토건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 - 安 “이기는 단일화 원칙 입각 모든 테이블 열고 머리맞대야”
2012대선29	경북 매일	11. 12.	3면	- 박근혜 “가계부채 해결 추진하겠다”
2012대선30	경북 일보	11. 12.	1면 3면	- “국민행복기금 18조 조성 가계부채 해결” - 문·안, 종합정책자료 발표
2012대선31	아시아 일보	11. 12.	1면 2면 3면	- 安, 반값선거운동 선언 - 문재인, 5대공약 발표 - 차, 18조원 규모 국민행복기금 조성 - 문재인 대선공약 ‘일자리’ 강조...책임총리제 공약
2012대선40	아시아 투데이	11. 15. 11. 16. 11. 19. 11. 20. 11. 21.	1~2면 3면 1면 3면 4면 1면 3면 1면 3면 1면	- “文 이중플레이로 단일화 협상 중단” - 文측 양보론이 발단... 文·安 단일화 파경? 봉합? - 文의 참모형 리더십 한계 - 민주 자초 단일화 파행... 결국 부메랑? - 분열 아이콘 ‘親盧 패권에 국민 등 돌린다’ - 민주 구태정치에 선 곳은 안철수 - “文 흑색선전만... 권력집착 스토커 같다” - 새누리, 文 에 십자포화 “민주 전매특허는 여론 왜곡” - 文 ‘신불자 게이트’ PK민심 이반 조짐 - 단일화에 목맨 文·安, 결국 테이블로 - 그때그때 다른 지역공약 ‘文 말바꾸기’ 논란 - 文 언론정책에 ‘진실성’ 의구심 - “여론조사도 수용” 文 자신감... 믿는 건 조직 세몰이? - “文, 복지재원 106조 확보는 허구” - 文 ‘통큰양보’는 포장된 통큰욕심?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11. 22.	3면 4면 1면 2면 4면	- '무늬만 큰형님'... 文 리더십 다시 도마위에 - “문재인은 옹졸하다” - “문재인 ‘盧 NLL 발언’ 거짓 가능성” - “朴 출산 그림의 폭력·가학성” - 민주당 본래 속성과 일맥상통“ - ‘버스 반발’ 불지른 문 등 책임 불가피 - 저축銀 피해자들 “文, 대통령 될 자격 없다.” - “두 사람, 앞에선 형님·동생... 뒤에선 너죽고 나살자” - ‘무늬만 용광로’ 文캠프 - 文 공보단장 이상호의 ‘과잉’ - 벌써 선거운동? 기호 2번 文 홍보차량 등장 - ‘단일’ 김칫국
		11. 23.	1~3면 3면	- 文 공보·홍보라인은 아마추어? - 절박한 文 ‘가상대결+적합도’ 승부수 - 文, 단일화토론서 ‘만형 모습’ 없었다.
2012대선44	경제 풍월	11월호 (통권 159호)	21~23면 52~55면 56~58면 100~101면 102~103면 109~111면 112~115면	- 또 햇볕정책 망령 - 국민이 공과 평가한다 - 어찌 벌주자고 하는가 - 죽기살기 야권 단일화 - 노 후계자 어쩔 셈인가 - 세 번 無血革命 완성 - 안철수식 거짓말들
		12월호 (통권 160호)	96~97면	- 여성대통령 혁신시대
2012대선51	미래 한국	통권 435호 (12.3. ~12.16.)	표지, 8~ 37면	- 지금은 여성시대 - 세기의 여성 지도자들 그들은 위기속에서 빛났다 - 미국은 지금 여성 상위 시대 - 美 최초 여성 대통령 꿈꾸는 힐러리 클린턴 -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 여성지도자에 대한 국민 생각 - 우리에게도 ‘철의 여인’이 필요하다 - 南北 모두를 품는 리더십을 기다린다 - “여성의 강점 활용하면 유리천장은 없다” - 멋진 여성의 3대 조건 - 딸의 롤모델을 찾아서 - “박근혜, 흐름탔다” - “정수장학회는 장물이 아니다”

### 3. 의견광고

시민단체 등의 의견광고를 게재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유도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 건수도 10건으로 여전히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정치적 지향에 따라 상대방 후보나 정당을 편취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경우가 많았다. 또 상업 광고를 빙자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경우 경고 결정을 내렸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대선15	조선 일보	7. 25.	A31면	- '남한정부가 채찍만 써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안철수 씨는 國籍(국적)이 어디인가?
2012대선16	한겨레	7. 25.	30면	- 5·16 군사반란을 미화하는 박근혜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2대선23	조선 일보	10. 10.	A33면	- 불굴혼 박정희
2012대선26	동아 일보	10. 25.	A35면	-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을 모십니다!!
2012대선27	조선 일보	10. 25.	A34면	-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을 모십니다!!
2012대선32	조선 일보	11. 10.	A32면	- 나는 왜 18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해야 하는가?
2012대선34	문화 일보	11. 14.	39면	- ‘노빠’, ‘폐족’들이 다시 활개치기 시작, 경제·안보, 또 흔들리게 할 것인가?
		11. 15.	31면	-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을 모십니다!!
2012대선35	서울 신문	11. 15.	31면	-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을 모십니다!!
2012대선36	경향 신문	11. 16.	2면	- 2012 정권교체와 국민후보단일화를 촉구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 300인 선언
2012대선41	한겨레	11. 20.	10면	- 해외동포들이 6·15 10·4 통일대통령을 바라며, 2012 대선후보들과 국민들께 드리는 공동호소문

#### 4. 정책비교평가 결과의 공표

제18대 대선 선심위에서 심의한 선거기사 가운데 특기할 만한 위반 유형 중 하나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한 후 그 결과에 점수를 부여하거나 서열화하여 공표한 보도다. 공직선거법상 공약의 비교 평가는 가능하나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금지된 사항이다. 이에 대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이해하도록 돕는 보도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이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총 8건의 해당 보도에 대해 모두 ‘주의’ 조치했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대선38	중앙 일보	11. 13.	B1,3면	- 대선 공약 집중 해부 전문가 10인이 평가한 가계부채 대책 - 박·안 6.3점, 문 6.0점... 빛 안나는 빛 대책
2012대선39	동아 일보	11. 15.	A1면 A5면	- 빅3 일자리공약 평균 5.8점 - 차 해결의지 부족... 文 뜯구름 잡기... 安 좌우정책 혼란
2012대선45	서울 신문	11. 29.	5면	- 가계부채 해법, 차 고تب분담 지원책 초점·文 제도 개편에 무게
2012대선48	여성 신문	1214호 12. 1. ~12. 7.	1면 6면	- 평균 'C' 학점... 여성공약 다시 써라 - "후보들의 여성정책 철학을 볼 수 없다"
2012대선49	데일리 노컷 뉴스	12. 3.	6면	- 유력 대선주자 여성정책공약 평가
2012대선50	경향 신문	12. 4. 12. 5.	1면 6면 1면 5면	- 경향·경실련 13대 대선의제 공약 평가 - 선택 D-15 경향·경실련 '공약 평가' ①청년 실업 해결 - 경향·경실련 13대 대선의제 공약 평가 - 선택 D-14 경향·경실련 '공약 평가' ②고령화 사회 대책
2012대선52	시사 서울	12. 3.	3면	- 대선 여성공약 비교해보니... 평균 C학점
2012대선53	동아 일보	12. 7.	A1면 A4면~ A5면	- 차·文 15개 정책, 본보-정당학회가 검증해보니 - 선택 2012 대선 메니페스토 정책검증

## 5. 기고 위반

금번 대선 심의위에서 제재한 기고 관련 심의기준을 위반한 매체는 총 4곳으로 총선보도와는 달리 이번에 제재한 언론사의 기고 등의 보도 행태의 특징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특정 후보를 과도하게 비판하거나 인신공격으로 비칠 만큼 상대를 비난한 내부 칼럼을 게재했다는 점이다. 특히 시민일보는 특정 후보자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약 2주간에 걸쳐 해당 후보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칼럼을 연속 게재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사과문 게재 명령을 받았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대선19	시민 일보	9. 10. 9. 11. 9. 12. 9. 13. 9. 14. 9. 17. 9. 18.	5면	- 안철수, 국민을 바보로 아나? - 안철수,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 안철수 '불출마 종용' 진실은? - 안철수, '곰수 정치'부터 배웠나 - 안철수, 킹이나 킹메이커냐 - 안철수 발목 잡는 '안철수의 생각' - 문재인, 안철수에 '책임총리' 추파
2012대선20	경북 도민 일보	8. 30. 9. 3. 9. 5. 9. 13. 9. 17.	19면	-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외면한 안철수 강의 - 탈세용 '페이퍼 컴퍼니'와 안철수용 '페이퍼 정당' - 안철수의 '아파트 딱지'와 '대선불출마' 암시 - 민주당 문재인과 안철수의 '위험한 동거' - 기어코 대선 출마하겠다는 안철수에게
2012대선21	대구 일보	5. 7. 7. 30. 8. 6. 9. 3. 9. 10.	26면	- 안철수 불가론 - 안철수 불가론(2) - 안철수 불가론(3) - 안철수의 '위대한' 이미지 조작 - 안철수 검증은 네거티브일 수 없다
2012대선33	시사 서울	11. 13.	3면	- 박근혜 지지자들의 '생각'